

정보의 빈부격차 막을 최후의 보루

예산 증액과 공공성 강화가 관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전근대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도서관 정책·예산·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도서관이 논의되는 형편이다. 도서관계와 출판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도서관구입비 증액과 공공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빈부격차를 막을 최후의 보루기 때문이다.

21세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도서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거창한 이상이 결코 아니다. 도서관예산 및 도서관구입비를 증액해달라는 '원시적' 요구로 모아진다.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 도서관 통계만 얼추 훑어봐도 금세 수궁이 간다.

도서관 예산 증액이 급선무

1999년 한국도서관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자료 구입비는 248원, 장서수는 0.42권으로 후진국 중의 후진국 수준이다. 이웃 일본과 견줘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수는 우리보다 7배, 국민 1인당 장서수는 14.9배, 자료구입비는 무려 30.4배나 앞선다.

“도서관 예산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전제다. 특히 할당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서관구입 예산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양서를 선별해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의 충원과 재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부장의 말이다. 그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공서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인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무협지나 베스트셀러를 요구해 장서 구성에서 문학류가 비대해지는 기형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중심 도서관'을 표방한 동대문도서관의 이숙자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한다.

“도서관 자료의 이용 극대화가 우리 도서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나서는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호의 장인용 대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예산지원과 함께 새마을문고의 활성화가 도서관 문제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내다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 가운데 일정한 액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은 자료나 인력 제공 형태로 새마을문고를 보조하는 방안이다.

“집 근처 도서관을 가보면 이용자들로 몹시 북적댄다. 시민들 사이에 독서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고 본다. 그것을 충족시킬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의지만 탓하지 말고 시민들이 나서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 도서관 환경은 급격히 바뀔 것으로 본다.”

도서관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출범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위원장 도정일·성완경)는 지난 6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관구입비 증액 캠페인'을 벌였다. 상임집행위원 김재운씨는 정책·예산·인력 등 도서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역설한다.

“도서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파급효과가 크다. 출판계의 적정 이윤창출 구조가 보장되고 나아가 지식의 재생산 구조도 확고해져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된다”며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만큼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고 말한다.

문화복지 위해 시민이 나서야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이해연 대표는 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시민과 도서관계가 협력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공공도서관의 개념이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인 도서관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남 교수(한성대 문헌정보학과)는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신자유주의를 경계한다.

“미래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접근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도서관을 수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무교육이나 도서관은 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 박천홍 기자